

# 한국 경제의 선진화 방향

한국 경제는 그동안 양적인 팽창을 거듭해 왔다. 경제 규모면에서는 우리 경제도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96년까지 선진국들의 경제협력기구인 OECD에 가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최근에 들어서 경제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21세기의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내외 경제 환경의 급변은 한국 경제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유병규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경제학

## 한국 경제의 현실

### OECD와 한국 경제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30여 년간 연평균 8.4%라는 고율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에 따라 한국의 GNP 규모와 교역액 규모는 1992년 기준으로 각각 3,057억 달러와 1,584.1억 달러로 세계 15위와 13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OECD 회원국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중간 국가 그룹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92년 기준

<표 1> 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 경제

1992년	OECD(A)	OECD(B)	OECD(C)	한국
GNP 규모(억 달러)	20,255.6	2,442.1	659.2	3,057.0
교역액 규모(억 달러)	5,238.8	1,442.0	412.0	1,584.1
1인당 GNP(달러)	28,101.2	21,870.3	10,563.6	7,007.0

자료: 한국은행, 「세계 속의 한국 경제」, 1994에서 재작성.

주: 1) OECD(A), OECD(B), OECD(C) 구분은 OECD 가입국인 25 개국을 항목별 순위대로 각각 8 개국, 8 개국, 9 개국으로 나누어 평균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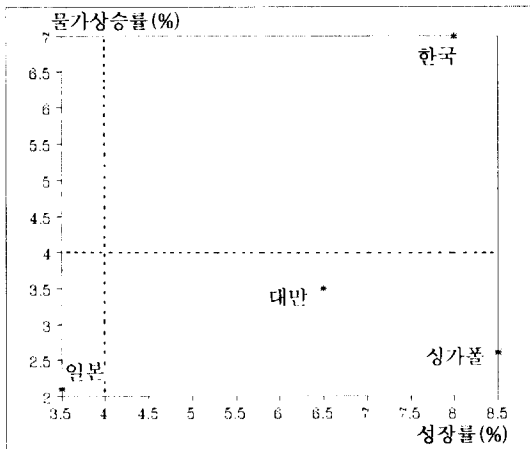
2) GNP 규모 기준으로 (A) 국가 그룹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캐나다이고 (B) 국가 그룹은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멕시코,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이며 (C) 그룹 국가들은 노르웨이, 포르투갈, 터키, 핀란드, 그리스, 뉴질랜드, 아일랜드, 아이스랜드, 룩셈부르크임.

으로 7,007 달러로서 OECD 회원국의 하위 국가 그룹 평균인 10,564 달러보다 작으나, 멕시코의 3,728 달러, 터키의 1,924 달러보다는 훨씬 크다.

### 성장 내용의 부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외형 규모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성장 내용이 부실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1) 고비용 경제 체질, 2) 성장 구조 취약, 3) 대외 거래 구조 부실, 4) 국민 복지 수준 미흡으로 분석된다. 첫째, 국내 경제는 경쟁국들에 비해 성장에 따르는 물가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비용 경제 체제이다. 88년부터 93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에 대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비를 보면 한국이 0.9인데, 싱가폴은 0.3, 대만은 0.5, 일본은 0.6으로 한국에 비해 월등히 낮다.

<그림 1> 성장과 물가의 상관 관계 비교



자료: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1994. 11. 20.

주: 88~93년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평균값임.

이는 우리나라의 국내 금리 수준과 임금 인상률이 경쟁국들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매출액 대비 물류 비용 비중(92년 기준)도 15.7%로 선진국의 7~11%보다 2 배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비용 경제 체질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표 2> 이자율과 임금 인상률 비교

(%)

	한국	대만	싱가폴	일본
이자율	13.70	7.82	5.50	2.28
임금 인상률	14.5	9.5	5.5	2.3

자료: 한국은행.

주: 이자율은 94년 9월 현재 한국은 회사채 수의율, 대만과 일본은 CD 기준, 싱가폴은 아시아-달러 기준임. 임금 인상률은 91년부터 93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임.

둘째, 국내 경제의 성장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간 성장의 이중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심하며, 경기 호황 속에도 어음 부도율이 급증하는 경제 성장의跛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화학 공업의 중간재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성장의 실속이 없다. 핵심 부품 및 중간재의 국산화 정도가 미진하여 이들 제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은 완제품 조립 생산 체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 부품 및 중간재 수입 의존형 생산 체제는 신제품 개발을 어렵게 하는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표 3>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성장률 차이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어음부도율	0.04	0.04	0.06	0.12	0.13	0.17
중화학 공업(A, %)	6.7	14.0	12.3	7.6	8.6	12.1
경공업(B, %)	0.2	2.3	2.9	-0.3	-3.3	3.3
A-B(% 포인트)	6.5	11.7	9.4	7.9	11.9	8.8

자료: 한국은행.

주: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 중 94년은 3/4분기 기준임.

더욱이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경쟁국들에 비해 작고 脫제조업화 속도가 일본보다 빨라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이 취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표 4> 제조업의 중간재 수입 의존도

	한국					일본	
	1980	1985	1987	1988	1990	1980	1987
제조업	22.7	21.7	20.5	19.3	17.8	10.5	4.8
중화학공업	30.2	31.1	25.5	23.4	19.3	11.2	4.6
경공업	15.0	13.2	13.7	13.3	14.4	8.8	5.1

자료: 산업연구원, 「1990년대 산업 정책 방향과 정부의 역할」, 1993. 2.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1990.

주: 수입 의존도(%) = (수입중간재투입액/총투입액) × 100

셋째, 대외 거래 구조도 부실하다. 수출 증가가 국내 상품의 자체 경쟁력 상승보다 오히려, 중국 시장 개방, 아시아 국가들의 개발 수요 증대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에 따라 상품별로는 중화학 공업 수출 비중이 늘고 있으나, 주요 수출 시장인 對美·對日 수출의 총수출에 대한 비중은 축소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경제는 부품 및 중간재의 국산화율이 미흡해서 경기 상승에 따라 자본재 수입이 급증한다. 이는 경기 상승기에 경상수지 적자를 누적시켜서 경기 상승 효과를 훼손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특히 자본재의 對日 수입 의존도가 커서 우리나라 외채 총액이 대일 무역 적자 누적액이라 할 정도로 對日 무역 적자가 韓·日 수교 이후 지속적으로 누증되고 있다. 또한 해외 투자도 활발하지 못해 투자수익수지 역시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은 총외채를 증가시키고 개방화 시대의 정책 대응 능력을 약화시켜서 일부 남미 국가들처럼 대외 개방 정책을 와해시킬 위험을 증대시킨다.

<표 5> 산업 구조 비교

	한국			대만			일본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서비스업
1985	12.5	31.0(29.3)	54.1	7.7	37.0(36.0)	55.4	3.2	29.9(29.6)	66.9
1990	8.7	29.7(29.2)	61.6	4.1	34.8(34.4)	61.1	2.5	29.2(28.9)	68.3
1993	7.1	27.4(27.1)	65.5	3.5	33.4(32.9)	63.3	2.2	28.2(27.9)	69.0

자료: 한국은행, 「세계 속의 한국 경제」, 1994에서 재작성.

주: 1993년 중 일본은 1992년 기준임.

<표 6> 수출입 구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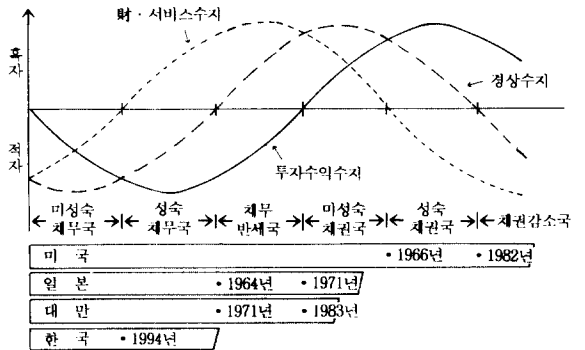
		1988	1990	1992	1994(1~10)
국별 비중(%)	북미	38.1	32.4	25.7	23.2
	미국	35.3	29.8	23.6	21.7
	유럽	16.3	18.5	15.4	14.1
	아시아	34.7	37.9	42.9	48.0
	일본	19.8	19.4	15.1	14.3
	중국	0.6	0.9	3.5	6.5
상품별 비중(%)	중화학공업	55.3	56.5	62.8	67.8
	경공업	39.1	38.5	33.0	28.3
자본재 수입 비중(%)		36.7	36.5	37.7	39.4
경상수지(억 달러)		141.6	21.8	-45.3	-45.0
대일 무역수지(억 달러)		-39.2	-59.4	-78.6	-96.7
투자수익수지(억 달러)		-20.2	-9.5	-11.4	-12.9
총외채(억 달러)		311.5	317.0	428.2	542.0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1994. 11.  
 주: 총외채 중 94년은 11월말 기준임.

이처럼 경상수지의 흑자 기반이 정착되지 않아 국제수지 발전 단계상으로 볼 때 한국은 아직까지 '미성숙 채무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수지 발전 단계는 미성숙 채무국→성숙 채무국→채무 반제국→미성숙 채권국→성숙 채권국→채권 감소국 순서인데 일본은 1964년에 채무 반제국 수준에 돌입했으며 이때 OECD에 가입하였다. 대만은 1971년에 채무 반제국 수준에 돌입했다.

끝으로 국민 경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복지 수준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경쟁국 수준을 크게 밀돌고 있다. 예를 들면 병상당 인구가 한국은 379 명으로 일본의 5 배, 대만의 2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의 의료 혜택 수준이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국제수지 발전 단계상 한국의 위치



자료: 일본경제기획청, 「세계경제백서」, 1987에서 재작성.

### 경제 환경 변화

선진국 경제를 지향하는 데 있어 성장 구조의 부실 못지 않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급속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이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환경 변화는 20세기와 21세기를 구분

<표 7> 국민 복지 수준 비교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폴	한국
주택 보급률(%)	109.6(90)	111.1(88)	98.9(92)	89.5(85)	72.4(92)
병상당 인구수(명)	171(80)	74(91)	217(83)	247(81)	379(92)
남자 평균 수명	71.9(89)	76.4(91)	71.1(89)	71.3(90)	67.7(91)
승용차 보급률(천명당)	574(90)	283(90)	141(92)	287(90)	79(92)

자료: 한국은행, 「세계 속의 한국 경제」, 1994에서 재작성.

주: ( )안은 해당 연도임.

짓는 세기말적인 변화라는 데 특징이 있다. 따라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과거의 사고와 관행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의 내용은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 지방화, 통일 경제화로 대별할 수 있다.

세계화의 단서는 70년대 후반부터 활발해진 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한 경영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세계화 현상은 95년부터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의 규정대로라면 세계는 5년간의 이행 기간이 끝나는 2000년부터 '국경 없는 하나의 열린 시장'으로 변화한다.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축소·완화되고 농산물·투자·서비스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판매·경쟁의 세계화' 현상이 심화된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국가와 기업만이 살아남게 된다.

한편 세계는 19세기말 산업 혁명에 버금가는 '정보 혁명'을 통해 정보화 시대·지식 사회·초산업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정보화로 지식의 종합화가 촉진되어 첨단 기술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며, 시간과 공간의 축소가 이루어

져 인류의 생활 방식·소비 형태·생산 방식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앞으로는 정보를 가공하고 엮는 인간의 '지력'과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된다.

국내 경제는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맞춰 80년대부터 자유화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90년대에는 국내 금융 시장의 자유화 조치가 완결될 전망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97년에는 국내 금리 결정은 모두 자율화되며 국내 자본 시장 역시 완전 개방된다. 외환 자유화 폭도 크게 확대될 것이며 환율 제도는 자유변동환율제로 변모해 나갈 것이다. 금융 시장의 자유화는 국내 경제를 소규모 완전 개방 경제 체제로 전환시킨다. 이는 국내 경제 변수들의 세계 경제와의 연계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 변수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세계 경제에서 세계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지방이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이른바 지방화 현상이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glocalization 시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으로써 각 지역간 자체적인 성장 전략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지방화 시대의 경제적 의의는 경쟁의 심화에 있다. 개방과 세계화에 의한 '대외 경쟁'과 지방 자치에 의한 '지역간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남북 경제 교류는 세계화 추세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의 남북한 교역 실적은 2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북한의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북한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위탁 가공 무역은 91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94년 11월말 현재 위탁 가공 교역 승인 실적은 완제품 승인 기준으로 90건, 16개 품목, 1,486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4.2배 증가하였으며 93년 전체 실적에 비해서도 3.4배 증가하였다. 남북 경제 교류의 활성화는 통일 경제와 동북아 지역 경제권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威脅과 機會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한다.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경쟁의 격화이다. 앞으로는 세계 초일류 기업들과 경쟁하여 살아남아야 한다. 경제 환경의 불안정성 역시 위협 요인이다. 경제 환경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경제 변수의 불안정성도 증대한다.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지구화는 최대의 기회 요인이다. 세계가 우리의 활동 무대가 되는 것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시장이 협소한 우리로서는 가장 유리한 성장 기회를 얻는 것이다.

## 새로운 정책 방향

### 신정책 이념·목표 설정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향후 수 년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WTO 체제 출범을 계기로 구체화되는 21세기의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와 경쟁 구조에 적응하면서, 선진 경제권 진입과 남북 통일의 초석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선진화는 단지 몇 가지 정책 수단을 바꾸는 것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경제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신정책 이념이 설정되고 새로운 정책 목표(New Vision)가 제시되어야 한다. 신정책 이념은 인간성 회복을 바탕으로 인간 생활의 정신적·물질적 풍요를 추구하고 인간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신인본주의"가 되어야 한다<sup>1)</sup>.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은 맹목적인 고도성장만을 추구해 옴으로써 경제 성장에 상응하는 정치·사회·문화의 발전이 뒤따르지 못하였고,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신적 지향 가치가 정립

1) 19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神本主義에 대응한 人本主義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新人本主義라 함. (金重雄, "韓國 改革의 哲學과 戰略을 말한다", 「月刊 朝鮮」, 1993. 4. 참조)

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도덕성 결여 등 경제 사회의 병리 현상이 노정되어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창조적 전문 지식인이나 전문가 집단의 휴먼웨어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인간 본래의 창의성 개발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이는 “신인본주의”가 존중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신정책 목표는 21세기 ‘선진 경제 사회’를 달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선진 경제는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선진 경제는 ‘사회 질서’를 존중하며 ‘상호 신뢰’하는 사회이다. 이는 개방화되고 자율화되는 경제 체제가 경제 주체들의 상호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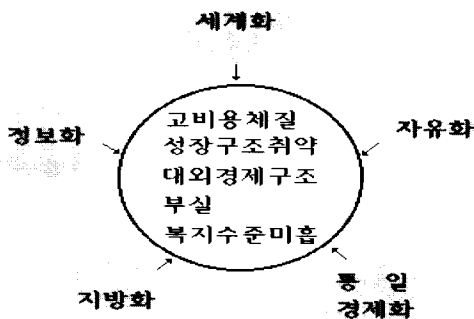
뢰감 속에서 원활히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 경제는 ‘조화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지역 간·계층 간·부문간의 ‘균형적이며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여 경제 성장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 정부와 경제 주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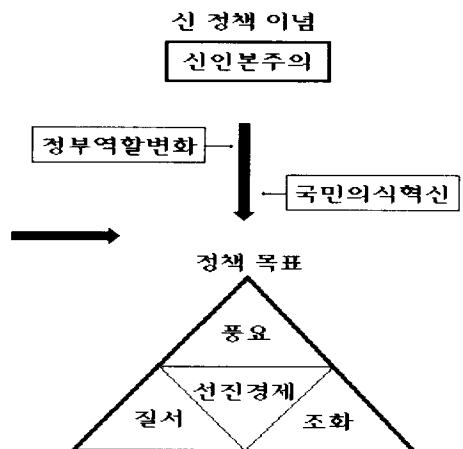
신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변혁되고 경제 주체의 의식이 혁신되어야 한다. 단순한 정책 수단의 변화에 앞서 정책 주체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제 환경하에서는 먼저 정부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혁되어야 한다.

<그림 3> 환경 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경제 정책 이념과 목표

( 선진 경제화 과제와 환경 변화 )



( 신경제 정책 이념과 목표 )



개발 시대에는 정부가 한정된 자금과 인력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었으나, 새로운 시대에서는 '자원의 세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부 역할은 이전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자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봉사자로서 변모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공공 서비스를, 기업에게는 최상의 기업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과감한 의식과 행태의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 역할은 경제 내에 '공정한 경쟁 규칙'을 정립하고, 기술 및 인력 개발, 사회간접 자본 및 환경 보호 투자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고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의 성공적 수행은 정부가 전문적인 경영과 행정 서비스 체제를 갖추어 생산성을 최대한 향상시킬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소수 정예화되어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확립되고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개혁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 주체들의 의식도 선진 자본주의 체제에 걸맞게 혁신되어야 한다. 국민 의식 혁신의 과제는 1) 세계인으로서의 '인식' 전환, 2)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법 질서 준수 풍토' 형성, 3) 개인의 창의와 노력을 중시하는 '능력 본위 사회' 형성, 4)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건전한 소비 문화' 정착, 5) 제조업을 중시하고 부의 건전한 축적을 존중하는 '淸富 정신' 확립, 6) 공공 복리에 중요한 국가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집단 이기주의' 추방, 7) 금융 거래를 자본 이식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賤民 자본주의 의식'과 경기 호황기를 틈 타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부를 축적하려는 '穡富 의식' 불식을 들 수 있다.

### 정책 과제

새로운 경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 단기 정책 과제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표 8> 정부 역할과 경제 주체들의 의식 변화 방향

	지금까지의 역할과 의식	미래 변화 방향
정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 성장 주도</li> <li>직접적인 관리와 통제</li> <li>계획과 지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성장 후원</li> <li>간접적인 지원과 봉사</li> <li>경쟁 규칙 설정과 감시</li> </ul>
경제주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수주의적 경향</li> <li>기본 질서와 법 경시</li> <li>허례허식, 모방적 소비 문화</li> <li>혈연, 학연 위주의 청탁 사회</li> <li>부의 축적을 무조건 경시</li> <li>집단이기주의 팽배</li> <li>賤民자본주의와 穡富의식 성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인으로서의 자각</li> <li>법질서 존중 풍토 형성</li> <li>합리적 소비 문화 정착</li> <li>능력 본위 사회 형성</li> <li>淸富 정신 확립</li> <li>상호 이해·협력 문화 조성</li> <li>선진 산업자본주의 의식 투철</li> </ul>



때 1) 경제 안정 체질 정착, 2) 성장 잠재력 확충, 3) 국민 복지 향상, 4) 통일 경제 기반 확립으로 설정할 수 있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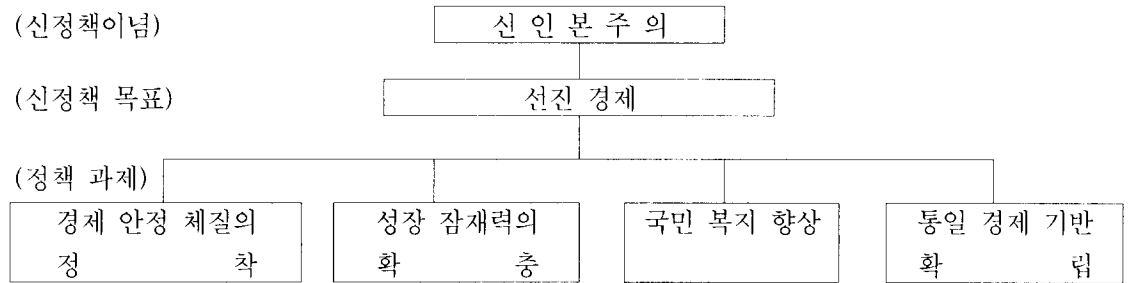
신경제 정책의 목표 달성은 '경제 안정 체질의 정착'에서부터 비롯된다. 경제 안정은 대외 경쟁력 향상 및 대외 개방에 따르는 충격 완화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물가 안정은 단순 통화 관리에 의한 지수 조정 정책에서 벗어나 유통 구조 개선,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통한 高비용 경제 체질의 근본적인 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이루어 국민 화합·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신산업·통상·금융 재정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둘째,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농어촌과 중소기업과 같은 국내 경제의 취약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 온 국민 생활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여건의 질적 향상에 힘을 써야 한다. 통일 경제 기반 확충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민족 공동체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익성 및 상호 이익 증대 측면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對北 접촉은 정부보다는 민간 기업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OECD 가입은 대외 과시용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2차 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일본도 戰前 경제력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이처럼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만큼 경제 주체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적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 경제의 내실화를 통해 경제의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각오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림 4> 새로운 정책 목표(New Vision)와 과제



2) 자세한 내용은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한국 경제의 현 위상과 새로운 정책 방향」, VIP Report(제 28호), 1995. 1. 11. 참조할 것.